

# 확실한 대안을 위하여

-발끈한 캠페인성 운동으로는 핵문제를 해결 못한다-



박 창 근  
(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최근, 대만이 자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핵폐기물을 북한에 수출하는 문제로 국내외의 환경단체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심지어는 장원교수가 이끄는 녹색연합 대표들이 대만에 가서 공생을 권유했지만, 봉변만 당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원자력 발전과 핵문제에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는 GREEN PEACE도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말하자면, 원시적 환경문제에 얽매어 있던 한국의 환경운동이 고차원(?)의 환경문제 그것도 정치적이며,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갖고 한판 씨름을 피야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씨름에서 이기기(?)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반대 논리와 핵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대처방안을 제대로 무장(대책)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수 없다.

대만의 핵폐기물을 타국에 그것도 우리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이송한다는 감정적인 측면만으로 발끈하여, 아우성치는 따위나... 이때다 싶어 TV에 얼굴을 내미는 자칭 환경문제 전문가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등장하는 캠페인성이어서도 안된다.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수요에 공급이 따르듯이 북한이 핵폐기물을 사겠다고 팔겠다는 대만인지? 핵폐기물의 위해성을 모를리 없는 북한이 단순히 몇푼의 돈 때문에 대만에서 공포의 쓰레기를

사오겠다는 것인지? 문제의 진의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곁들여, 과거 대만에 등을 돌렸고 현재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그동안 국내의 원자력 발전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대처하던 일부 국내 환경단체들이 이번의 문제도 단순히 원자력 발전문제와 핵폐기물 문제만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핵폐기물이 무서우니까. 원자력 발전은 안된다는 식의 원시적 반핵운동으로는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매듭지을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자고 하는 세계의 여론이 확실해 질수록, 원자력 개발 옹호론도 새롭게, 단단히 바뀌어 왔다. 예를 들면, "선진국과 제3세계와의 사이에 에너지 분배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이제 부터는 기술력이 있는 선진국은 우라늄 연료로 발전하고 한계가 있는 화석연료를 제3세계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는 "원자력 발전소는 지구 환경을 지킨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최적의 발전 방식이다." 등의 극히 상식적인 것인데도,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분명한 원자력 발전 반대론은 정립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탈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일부 국가에 의한 에너지 자원의 대량 소비와 위기에 빠진 지구의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면, 의외로 좋은 해결책이 보이는데, 그 예로 "Best mix 론"이 있다. 즉, 여러가지 발전 방식의 이상적인 혼합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 "Best mix 론"이다. 이렇게 "Best mix 론"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원자력 발전이 짐이 되고, 원자력 발전에 한계치를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Best mix 론"에는 많은 비판이 따른다. 즉, "Best mix 론"은 자국의 안정과 번영에만 집착하는 편협한 가치관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아끼는 마음이나 자연을 손상하지 않는 배려나 제3세계 사람들과의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등르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자원의 분배가 조금이라도 세계모든 인류에게 평등한 "Best mix"의 방향에 가까워지려면 그 추진력은 오늘날 제3세계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의한 자원 재분배의 요구일 것이다.

적어도 선진국의 시민들은 그런 자원 재배분의 요구를 지극히 적당한 요구로써 그리고 자신들의 낭비적인 생활을 고치는 기회로써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지금부터 재생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준비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개인과 국가 이기주의가 그것을 용납할 것인가? 즉, 재생 불가능한 것을 사용해 버리는 것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이기주의가 조금이라도 면죄될 수 있는 경우는 그 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한 자원이 없어도 자신들과 똑같은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재생가능한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을 때 뿐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부지런히 세우고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화력발전소라는 사실이다. 그것도 탄산가스의 발생량이 훨씬 많은 석탄 화력의 건설계획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로 멈추었을 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이고, 이미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석탄 화력으로의 이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는 화력발전의 시대가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지구 환경이 당면하고 있는 난제인 온난화 현상을 화력 발전으로 부추킬 것인가? 현재 많은 사람들이 CO<sub>2</sub>의 증가에 의하여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듯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사실 온실효과의 문제에는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는 점이 많다. 탄산가스, 그것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것만을 갖고 문제 삼는 것은 과학적이 못 된다.

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석탄 화력발전소 대신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더욱 위험하다. 원자력 발전소로 온실효과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되어 왔다. 오히려 원자력 발전은 온실효과를 촉진하고 에너지 전환을 방해한다.

설령, 조금은 억제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전세계에 몇 천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다면 그것만으로도 지구환경은 빠르고, 확실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다. 열오염의 측면으로 볼 때, 원자력 발전소는 열효율이 32%로 낮기 때문에 지구로의 방열량이 많아진다. 방열량의 3분의 2가 열오염으로서 환경에 방출되고 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단위 방사성 폐기물 일 것이다. 아니 고단위 폐기물만이 아니다. 저단위라고 불리는 것에서조차 인체에 위험한 독물이 나오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의 전체를 고단위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 반드시 고단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는가? 그렇다. 핵연료를 만드는 데에도 뒷처리를 하는 데에도 방사능 쓰레기의 산이 생긴다. 그리고 수명이 다한 후의 원자력 발전소나 핵연료 사이클 시설은 그것

자체로 거대한 방사능 쓰레기 더미가 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적어도 현재의 에너지 낭비 사회와 장래의 저에너지 소비 사회의 사이에 무한하게 보이는 간격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의 존재 자체가 전력 소비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도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발전소이므로 전력소비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즉, 원자력은 발전용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발전용 연료로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는 화력 발전소의 건설비에 비해 2배 이상이 더 들며, 그런 경제성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라도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출력조정이 어려워 항상 Full출력으로 계속 작동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수요가 있건 없건, 어쨌든 발전을 할 수 밖에 없고, 만들어 버린 전기는 결국 사용하게 할 수 밖에는 없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석유나 석탄이면 전력 수요가 적고, 연소시키는 양이 줄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지만, 핵연료는 발전용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로 멈추었을 때의 뒷바침을 위해서도 다른 발전소를 늘려야 하는 모순이 있다. 사고에 따라서는 하나의 발전소에 몇 기인가가 병설되어 있는 모든 원자로(발전기)를 멈추지 않고는 안되게 된다. 이것도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서도 4호로에 사고가 일어났지만, 1~4호로의 합계 400MW를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원자력 발전소가 늘면 다른 발전소도 늘고, 그 건설. 운전에 따르는 탄산가스의 방출량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결국 에너지 문제의 암은 원자력 발전소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원자력 발전은 탄산가스의 발생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원자로 내에서의 핵분열

반응만의 경우이다. 핵연료 사이클이라는 우회로와 그 사이의 수송을 포함시켜 생각하면 탄산가스의 발생량이 적다고 하는 설명은 억지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인구 밀집지역의 가까이에는 세울 수 없다는 입지 조건 때문에 소비지와 떨어진 곳에 대규모 집중형의 발전소 건설을 하고, 대용량의 송전선으로 전기를 보내온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의 특성에 맞추어 전력의 공급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때문에 소위 지역 분사형 에너지원이 개발되기 어렵다. 말하자면 효과적인 에너지 대책을 세울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라고하는 정치와의 결부성이 강한 에너지원이 경제 합리성을 작용하기 어렵게 하고, 유효한 에너지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의 집중이나 자연에너지 소비에 대한 시책으로서의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외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오늘 날, 인류에게 바람직한 에너지 대책을 생각할 때 핵원자력 발전이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환경을 지키는 유일한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소비를 적게 하고 재생가능하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가는 지혜이며,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을 창출해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직장·지역에서의 에너지 사용방법을 새로 정립해야 하고, 21세기에 이르러, 물자가 없었던 시대를 모르는 「신인류」가 증가해 오는 이상 에너지 의식은 생존적 차원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과 핵폐기물의 문제의 경우는 우리도 당장 어찌지 못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는 측면에서 Senastional한 아우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시니컬한 이런 외침은 어떤 것인가?

“왜? 하필이면, 대만제 핵폐기물을 사려는가? 같은 민족끼리, 우리의 핵폐기물을 사갈 의향은 없는가?”

# 국제 환경외교의 '97년도 계획 및 전망



신길수  
외무부 환경협력과 과장

오늘날 지구환경문제가 인류의 21세기를 향한 주요 해결과제중 하나로 부각됨에 따라,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는 환경의 해라 불릴만큼 유엔환경특별총회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회의 및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환경보전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몬트리올의 정서, 바젤협약 등의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여 관련 후속이행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산림보전,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 통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약채택 및 협상에도 논의 초기부터 참여해 오고 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 등 환경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OECD가입에 따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우리의 국제적 기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북아국가간 지역환경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와 이미 체결한 양자간 환경협력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혹은 격년제로 개최되는 환경협력 공동위를 통해 양자 환경협력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중·일 3국간 환경

상설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다자차원의 경우 해양분야에서는 황해 및 동해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94.9 동북아 5개국간 채택된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이 조기에 이행되도록 하고, 해양분야를 제외한 대기분야 등에서는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포괄적 환경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97년도의 국제 환경외교 계획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유엔 환경특별총회

유엔환경개발회의(92, 리우) 이후 5년간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환경특총이 97.6.23-27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 회의에는 G-7 국가 및 EU 국가 대부분의 정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리우회의에 버금가는 지구환경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특총에서는 그간 지구환경보전 노력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미진한 분야를 보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중점 추진분야 및 방법론 등

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유엔사무국은 동 특총 준비를 위해 의제 21 이슈별 이행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중이며 제 5차 CSD 회의(97.4) 및 실무회의(97.2)를 특총 준비회의의 형식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96.4. 제4차 CSD 회의는 유엔환경특총 개최의 목적을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및 Commitment 제고, 의제 21 분야중 성과가 미진한 분야의 원인 점검 및 향후 추진방안 모색, 1997년 이후의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우선분야 확정으로 규정 한 바, 그간의 지구환경보전 노력의 실패 및 성공사례, 유엔체계내 환경논의의 profile 제고, 97년 이후 중점논의 분야 및 CSD에서의 논의방법등이 특총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주연합은 동 특총시 지구환경보전 의지를 담은 정치적 선언 채택을 추진중이며, 미국, 캐나다등 기타 선진국도 특총에 대한 자국 입장을 정립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가 우리의 OECD 가입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환경회의임을 감안, 선발개도국으로서 우리의 지위 및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엔환경특총 대책반을 설치하는등 회의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

## 2.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

### 가. OECD

93.7.부터 OECD 환경정책 위원회(EPOC)에 옵서버로 참석해 온 우리나라는 96.10. OECD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OECD 환경정책위원회 및 그 산하기구등 OECD내 환경관련 논의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OECD 환경정책위에의 가입은 OECD가 가지는 분석능력, 환경과학분야에서의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선진화와 환경복지국가 건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서의 선진국 의무조항 적용문제 등 선진국으로서 요구되는 의무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OECD 가입을 계기로 우리의 환경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96.10 OECD 환경성과 평가팀을 초청,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및 경제정책, 그리고 국제환경협력 등 3개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성과 평가결과는 97.6 개최되는 OECD 환경성과그룹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동회의시 우리의 환경정책관련 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97년은 우리가 OECD 정회원국으로 OECD 환경활동을 전개하는 첫해이므로 OECD 기준에 부합되도록 국내환경정책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 선진환경논의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우리의 지구환경외교전략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나. APEC

92년부터 진행된 APEC내 환경논의는 96년도에 APEC 지속개발 실천계획(Action Programm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이 채택됨으로써 APEC 환경사업의 체계화와 구체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96.7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PEC 지속개발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APEC 지속개발 실천계획은 청정기술, 해양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3개 우선 추진분야로 결정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 실천한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APEC내 환경논의는 3개 우선추진분야의 구체적 이행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또한 97년도 APEC 환경각료회의에서 각료회의의 정기적 개최문제를 결정

키로 함으로써, 그간 구체적 전담조직 설치없이 APEC내 각종 실무그룹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던 APEC 차원의 환경협약의 메카니즘이 통합되고 또한 APEC 협력활동에 있어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APEC내의 환경관련 사업은 96년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97.4 토론토에서 개최될 지속개발 각료회의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로서도 청정기술분야 및 청정해양분야 문제를 다루는 실무그룹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도시지표 개발과 도시환경관련 국내 성공사례 수집 및 회원국간 교류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3. 분야별 지구환경회의

#### 가. 대기분야

##### < 지구온난화방지 >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제2차 당사국총회(96.7, 제네바)시 선진국들은 베를린 Mandate 협상(AGBM)결과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로 채택하기로 결정(Geneva Declaration)한 바 있다.

당초 EU측과는 달리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 채택에 반대해 왔던 미국, 일본 등이 제2차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이에 동조함으로써 가장 큰 입장변화를 보였으며 AGBM 협상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전기를 제공하였다.

'97년도에는 제3차 교토 당사국총회(97.12.1-12)를 앞두고 AGBM 협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97.2. 제6차, 97.7 제7차 97.10. 제8차 AGBM 개최 예정),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멕시코, 터키 등 OECD에 가입한 선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 의무부담 요청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 오존층보호 >

'97년도 몬트리올의정서 관련회의에서는 오존파괴 지수가 0.6인 Methyl Bromide의 필수적 농업용도 사용문제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CFC를 사용하지 않은 기관지·천식 치료제용 MDIs(Metered Dose Inhalers)가 개발됨에 따라 이미 필수적 용도를 제외하고는 CFC의 사용을 금지한 선진국 내에서 CFC를 제외한 MDIs로 조기에 전환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94년 총회에서 수혜개도국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95년도 총회에서는 개도국의 국내수요 충당을 위해 CFC 수출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까지 확보하였는 바, 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관심사항은 해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이 됨에 따라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바, 수혜개도국으로서의 혜택(규제물질 전폐의 유예기간등)을 자발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오존층 보호에 적극 협력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나. 생태계분야

##### < 생물다양성 보전 >

작년도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논의에서는 생태계자원 보전을 위한 조치의 전반적인 진전을 보았으며, 특히 전통사회의 식량농업 유전자원보전에 대한 보상을 위한 농부권리(farmers' rights)개념의 원칙적 도입과 생명공학제품(유전자 변형생성체, LMOs)의 국가간 이동 규제를 위한 의정서 작성작업의 개시가 주목된다.

첫째, FAO 주관으로 96.6월 라이프찌히에서 개최된 제4차 국제식물유전자원 기술회의는 「전지구적 실천계획」(Global Plan of Action)과 「라이프찌히 선언」을 채택하였는데 특히, 토속종 재배자(농부)가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개량, 유용성의 향상을 위해 기

여한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부권리(farmers' rights)를 간접적으로 명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전자 합성을 통해 생성되는 LMOs의 국가간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작성회의가 96.7월 덴마크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생명공학제품의 교역규제와 WTO 자유무역원칙과의 조화문제, LMOs의 국가간 이동절차로서의 사전통보합의(AIA)제도, 의정서 체계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바, 98년 말 작업종료를 목표로 97년 두차례 추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생명공학산업을 과학기술선진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추진중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동 제품의 수출량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biosafety관련 조치가 WTO/GATT 제반규정과 조화되도록 세부대응방안을 강구중이다.

### < 산림보전 >

96년중 「국제산림협약」제정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UN지속개발위원회(CSD)산하의 산림패널(IPF)회의가 두차례 개최되어 주요사안에 관한 각국의 입장이 개략적으로 정리되었다. 지금까지의 IPF 논의결과는 97.2월 유엔본부에서 개최예정인 제4차 산림패널 회의에서 최종보고서로서 정리되어 차기 CSD회의(97.4)에 제출될 예정이다.

IPF 논의의 핵심사안인 산림협약 재정 필요성문제에 관하여 개도국은 동 협약재정에 앞서 재정·기술이전의 선결을 요구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선진국중 EU그룹은 협약 필요성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미국 일본등이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등 부담가능성을 우려하여 협약제정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제4차 IPF 최종회의에서도 협약 제정을 위한 구체적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법적체계 마련은 IPF추가개최 또는 국제 forum

형식의 새로운 회의를 통해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열대목재의 주요수입국(세계2위)인 우리에게 주요 관심사안이 되고 있는 임산물 교역규제 문제와 관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방법으로 생산된 목재만을 교역대상으로 하려는 목재증명제도(certification and labelling)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논의진전은 미진한 상태이며 특히 개도국은 동 제도가 비관세장벽화될 가능성을 경계하여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왔다. 우리나라는 환경보전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해 나가는 동시에 목재의 안정적 수급, 산림개발 필요성 등 우리의 관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관련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갈 방침이다.

###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

96년도에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주요회의 결과중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곰종에 관한 권고안 채택이다. 호랑이 및 코뿔소에 이어 곰종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점증하고 있는 바, 97.6에 예정된 제10차 CITES 당사국총회에서 이 문제가 중요 의제중 하나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멸종위기 곰종의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홍보하고 여타 의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시킬 방침이다.

### 다. 폐기물

#### < 폐기물 해양투기 >

96.10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폐기물의 해상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런던협약의 개정의정서 최종 확정 및 채택을 위한 특별회의에서는 내해에 대한 의정서 규정의 적용, 의정서 이행 메카니즘 강화, 분쟁해결 및 책임과 배상절차 등이 확립됨에 따라 향후 중국 및 러시아 등과 폐기물의 해상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관련 분쟁의 발생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동 의정서는 97.4.1부터 98.3.31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될 예정인 바, 러시아 중국등 관련국 등의 비준동향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정의정서 서명, 비준여부 및 비준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있는 바젤 협약은 그간의 기술실무그룹의 협약 적용 폐기물 및 비적용폐기물의 분류작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금년 10월에 있을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적용 폐기물 목록을 어떤 형태로든 협약내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OECD 회원국 등)의 개도국에 대한 유해폐기물 수출금지를 골자로 개정된 바젤협약을 비준하는 국가도 늘어나 조만간 개정 바젤협약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협상을 통해 우리 산업과 연관이 깊은 폐기물들을 협약 비적용 폐기물로 분류하는 성과를 거두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 바젤협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OECD가입에 따른 선진국 의무부담이 불가피한 바, 지구환경 보호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나갈 예정이다.

## 4. 동북아환경협력

우리나라는 장거리 대기오염 및 해양오염 등 동북아 역내 국가가 공동으로 처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2년부터 꾸준히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동북아 환경협력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특히 지난 96년도에는 다자간 환경협력의 경우 그간 참가국의 유보적 반응으로 본격 논의되지 못한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상설 협력메카니즘 구축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동북아 환경협력체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 회의 〉

그간 두차례 회의를 통해 해양을 제외한 대기오염 방지, 생태계 보호등 포괄적인 역내 국가간 환경협력을 추진해온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 회의는 96.9. 제3차 회의시 참가 6개국간 환경협력을 위한 기본협력 체계(Framework for the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를 채택하고, 향후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 회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재정지원 하에 청정석탄기술 등 3개 사업의 실시를 승인하여 96년 10월부터 본격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동북아 환경협력은 그간 계획의 단계에서 이행의 단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97.8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제4차 회의에서는 신탁기금 및 사무국의 설치문제 등 Framework의 구체화를 본격 논의키로 결정함으로써, 3차회의 결과 마련된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기본협력 체계의 구체화 및 제도화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북대서양보전실천계획 〉

동해와 황해의 오염방지와 해양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동북아 국가간에 추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보전 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 NOWPAP)은 94.9 서울에서 제1차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5개 우선 사업분야 선정 및 협력추진을 위한 재정·제도적 조치등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채택한데 이어, 96.11. 일본 동경에서 제2차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여 5개 우선 사업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계획과 97-98년간 약 40만불의 사업예산을 확정함으로써 97년부터 세부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선박사고 등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유류오염 방제협력사업(사업 4)의 세부사업조정 및 회원국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활동센터(Regional



Activity Center) 유치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국내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유치 제안서의 UNEP측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년부터는 NOWPAP 정부간 회의가 매년 개최되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NOWPAP의 사무국 설치문제, 재정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차기 제3차 정부간 회의는 지금까지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중국 또는 러시아에서 금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 양자간 협력 >

◎ 한·일 환경협력

94.1 동경개최 제1차 한·일 환경공동위 이래 한·일 양국간 환경분야 협력증진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양국간 환경협력 공동위가 95년 서울, 96년 동경 등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다.

차기 제4차 한·일 환경공동위는 금년 상반기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난 1-3차 회의에서 합의, 검토된 36개 협력사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3차회의시 추진키로 합의한 방제협력의 구체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중 환경협력

93.10 체결된 한·중 환경협력 협정에 의거, 94.6 이래 한·중환경협력 공동위가 양국 수도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96.12.4-5간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제3차 공동위에서 97년부터 황해 해양오염 현황과 악을 위해 양국간 공동조사 사업을 실시키로 합의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해양오염을 저감시켜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로 볼 수 있다.

제4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는 금년 하반기 북경에서 개최되어 협력사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한·러 환경협력

한·러 양국간 환경협력은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 투기로 인한 동해 해양환경의 방사능 오염실태조사 및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대러 기자재 지원협력이 추가되고 있다.

95.1. 모스크바에서 제1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를 개최하여 핵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자재 지원 및 생태계 유지관리등 11개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철새보호를 위한 철새 이동경로 조사사업도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며, 97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제2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를 개최하여 제1차 환경공동위시 합의한 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협회 명칭 변경 알림**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 환경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 무엇보다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지구환경시대에 발맞추어 미력하나마 선진 한국환경건설을 위해 사업영역을 보다 광범위하고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업계의 발전을 통한 자원의 절약과 국가환경보전에 적극기여하고자 협회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알려들이오니 변함없는 상원과 많은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명칭

변경전	변경후
(사)한국정제연료유 재활용협회	(사)한국석유 재활용협회

2. 변경일시

- 1997년 2월 19일

3. 주소 및 전화번호

- 변경전과 동일

**사단법인 한국석유재활용 협회**